

방역망 뚫고 여왕개미까지... 추석 앞두고 '불개미 비상'

**생태계교란종 '붉은 불개미' 발견
현장 조사·추가 개체 채집 진행
중국산 석재서 대구로 직송된 듯
부산항만 방역·개미베이트 설치
검역대상 예외 석재도 검역 조치**

최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생태계교란종인 '붉은불개미'가 다시 발견돼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붉은불개미는 항만방역망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돼 확산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 사흘째인 이날 환경부, 검역본부 등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조사와 추가 개체 채집 활동을 진행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현장 주변에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9일 오후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붉은 불개미 군체를 발견한 조경용 석재를 천막으로 덮고 가스를 투입해 박멸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환경부 관계자들이 약제 살포와 조경석 석재 밀봉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검역본부 등에 소속된 10명이 투입됐다.

또 1차로 트랩 150개를 설치하는 등 20일까지 반경 5km 이내에 트랩 500개 정도 설치해 개미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항구, 보세창고 등 국경지역 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

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중국산 석재가 하역 후 대구 현장으로 직송된 것으로 보이고,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결혼 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강력한 초동 대처를 위해 해당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이미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석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했으며, 나머지 5개는 수출을 위해 신신대부두에 적치중이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재는 그 특성상 검역대상이 아니나, 세척하지 않거나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섞여 있을 우려

가 큰 석재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처리·1차 소독, 석재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8일 오후에 밀봉 보관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2마리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산업부 韓-英 브렉시트 영향 논의 무역작업반 3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0일 서울에서 '한-영국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지난 2016년 12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양국에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2월 및 12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향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노동부 본선 41팀에 총 2억 '소셜벤처 경연 대회'

고용노동부 19일 '2018 소셜벤처 경연 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 창업아이디어 대회로 그동안 여번비즈 서울, 모여댄, 심시일밤 등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배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 전국에서 922팀이 신청했다. 이후 7월에는 5개 권역별 예선심사를 거쳐 246팀을, 8월에는 권역대회 대면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73팀을 선정했고, 이날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1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본선대회 41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일반창업분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청소년 분야 대상을 비롯해 11팀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매입 추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 제외

정부가 2018년산 쌀 35만톤의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을 농가로부터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로는 25만톤을, 산물 형태로는 지난해 보다 1만톤이 늘어난 10만톤을 매입해 농가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18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동아시아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국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국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



/뉴시스

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비 5000톤을 일반비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비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비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FTA 이행 상황 공유 유관기관 협의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수) 서울 인터콘 파르나스에서 유명한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관세청, 업종별 협·단체, 자유무역협정(FTA)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2018년 상반기 중 업계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정에서 제기한 애로와 그간 자유 무역협정 이행위를 통해 해결 또는 협의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또 무역·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기관들은 수출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유 무역협정 활용 지원 사업 및 무역보험 지원,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개선과 보급 추진현황, 인증관련 주요 애로사례와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 다변화 대상 국가에서의 자유 무역협정 수혜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FTA활용홍보관 운영계획' 및 주요추진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우리기업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 진출 시 수출보험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을 우대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영세·소기업용 '간편형' 시스템 및 중견기업용 '수출공급망형' 시스템 개발현황을 발표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도 인증 및 기술규제에 관한 주요국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참석한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통상관련기관들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 실장은 "수출지원기관과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기관이 함께 한번에(ONE STOP)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내륙 강·호수서 요트 탄다... '마리나' 후보지 12곳 선정

해수부 춘천 의암호 등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내에 내수면 마리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마리나'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도심 레저형 마리나 조감도. /해양수산부

또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아울러,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